



특집 II

21세기 環境政策의 方向과 課題



환 경 부
기획과장 宋 在 用

『곳간이 차야 禮節을 차린다』는 우리 옛 俗談이 있다. 國民所得이 1만불을 돌파하고 곧 OECD 會員國으로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되어감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期待와 慾求是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곳간이 차기 시작하면서 예절을 차려야 할 時期가 온 것이다.

그로스만과 크루에거는 1991년 “NAFTA의 環境의 影響”이라는 논문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소위 5천불-1만불 假說로 설명한 바 있다. 1인당 國民所得(GNP)이 5천불을 넘어야 비로소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本格化되고 1만불대를 넘어야 環境保全的 經濟成長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인당 GNP의 증가에 따라 SO₂ 농도, 부유물질(TSP) 농도등이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增加하다가 5천~1만 4천불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시 下落하는 經驗的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는 환경문제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92년 6월 리우地球頂上會議(Earth summit)에서 전세계의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환경을 도외시하는 경제성장은 무의미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環境적으로 健全하고 持續可能的한 開發(ESSD)”의 이념을 실천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有限한 지구위에서 無限한 成長은 불가능하다”는 로마클럽(Rome club)의 『成長의 限界論(Limits to Growth)』이 제기된 지 꼭 20년만에 인류는 경제와 환경이 統合되는 새로운 차원의 開發理念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快適한 環境을 바라는 국민적 期待와 要求에 부응하여 金泳三大統領은 지난 3월 21일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중심에 선 一류국가가 되려면 우선 環境模範國家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와 우리 後孫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안전하고 쾌적한 自然環境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성한 義務”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나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綠色環境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率先垂範하는 『環境大統領』이 되겠다”고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 바 있다.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시점에서 大統領의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의지 표명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제 국민적 共感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 구상을 착실하게 實踐해 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大統領께서 21세기를 『環境의 世紀』로 전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灰色文明』·『회색삶』으로 대표되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이제 다음 세기는 『綠色文明』·『녹색삶』을 지향하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지난 20世紀까지의 人類는 지구표면을 前進하며 뒤에 荒野를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西洋에 있어서의 자연은 끊임없이 開拓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으며, 耕作地와 목초지를 개간하기 위해 숲을 除去해야 했고, 땅이 더 이상의 소출을 낼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지역으로 移動하곤 했다.

농업혁명 이후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던 土地는 산업혁명 이후 기계문명·대량생산의 그늘 아래서 生産手段의 하나로 轉落했다. 마치 그것이 인간에게 속하는 하나의 工產品(commodity)인 것처럼 인간은 토지를 濫用해 온 것이다.

그래서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의 저자 앨빈 토플러는 “우리는 自然이 낳아준 利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제까지 貯蓄해 놓

은 資本마저 까먹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1세기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는 公共部門의 率先垂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공직자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행동양식을 習慣化하도록 함과 아울러 政策決定過程에서도 다음 7대 과제를 중심으로 환경적 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生産 및 消費活動은 綠色化된다. 정부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내 모든 기업이 환경적으로 健全한 企業으로서 생존하며, 그린라운드등 밀려드는 높은 파고에 철저히 대비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유통등 기업 경영전반에 環境親和原則이 도입된다. 有害物質의 투입, 낡고 비효율적인 공정의 조기개선이 유도되며, 淸淨生産技術(clean-tech)의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경영 체제로의 전면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最高 經營層(Top executives)과의 정기적 간담회와 국공립 대학원에 환경경영자 과정의 신설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環境親和企業 지정제도는 건설업·유통업·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여 2000년까지 최소한 500개 기업이 참여토록 추진하고, 환경친화기업을 중심으로 3R 運動(Reduction, Reuse, Recycling)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環境마크 부여대상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재활용제품등 消費財뿐 아니라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기계용품과 資本財까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34개 품목 198개 상품에 부여된 환

경마크가 2000년에는 70개 품목 2,000개 상품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실적이 뛰어난 綠色環境企業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녹색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消費行態가 하나의 생활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環境基金도 확충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화시대에 맞게 정부는 自治團體의 環境管理能力를 제고함으로써 環境自治體制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地域環境保全計劃』의 수립을 지원하고, 매년 자치단체별 환경관리실적을 評價하여 우수자치단체에 그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영세한 자치단체의 環境財政自立度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쓰레기 수수료 등을 점진적으로 現實化해 나가고,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環境負擔金의 징수비용 교부율을 현행 10%에서 대폭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환경문제는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아는 것을 實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環境教育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학습과정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넉넉한 품성과 습관을 涵養케 함으로써 학교를 환경보전실천의 도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대학입학시험 논술고사에 環境倫理分野가 포함

되도록 하고, 환경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중심으로 환경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자율선발하며, 綜合生活記錄簿의 “사회봉사활동” 내용에 환경보전 활동이 포함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각 분야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社會環境教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지원하는 한편, 단순하면서 효과가 큰 환경보전 실천방안을 발굴하여 대중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넷째, 貿易과 環境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과 OECD 가입등에 대비하여 국내환경기준을 조기에 先進國 水準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健康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9개 微量有害物質의 함유실태를 정밀조사하여 2002년까지 먹는물 수질기준을 WHO 권고수준인 120개 항목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좁은 국토·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보다 크게 완화되어 있는 大氣環境基準도 WHO 勸告水準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중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 중 업계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0년대의 최적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각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排出許容基準의 경우 이미 예고된 '99년부터의 기준을 국내기업이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施行基盤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水質環境基準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환경기준 설정항목을 2005년까지는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천에서 富營養化를 일으키는 주요인인 질소·인에 대한 방류수수질규제를 하수처리장등 公共處理施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기술진보, 배

출원의 위치·규모, 배출수역의 이용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差等 設定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다.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總量排出賦課制는 일종의 廢水從量制라 할 수 있다. 기업에 미친 과금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7년에는 1~2종 大型業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오염물질 排出量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물림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오염저감 노력과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개발수준은 高級技術의 경우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정부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淸淨技術등 환경기술의 중점 개발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연구비중 환경부연구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국제수준의 綜合研究團地를 조성하고 있다.

세계환경시장의 급속한 규모확대와 더불어 國內環境産業의 育成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산업을 국가기간산업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尖端環境産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技術集約型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종합적인 환경기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環境産業體에 국내외의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다섯째, 環境基礎施設을 조기에 完備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물문제 만큼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물관련 施設投資를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보급율은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0%로 제고될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民間專門機關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의 양적인 부족과 지역간 不均衡

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충한다.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전국 20개 권역에 廣域埋立地를 설치하고, 광역매립지 설치가 곤란한 시·군에는 단독매립지를, 농어촌 지역에는 폐기물을 소각·매립·재활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綜合處理施設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環境投資財源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된다. 정부는 소비유동시설물·경유자동차등에 부과하는 環境改善負擔金의 부과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預置金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현행 地方讓與金중 수질오염방지 사업비의 규모를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세한 각종 환경관련 負擔金, 賦課金, 預置金등을 통합·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여섯째, 정부의 環境管理機能을 강화하고 效率化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전적 환경영향을 저감하는데 실효성을 갖도록 環境影響評價 專擔機構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대폭 보장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環境性 개념을 적용하는 한편, 그린 G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자원의 소모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물관리등 정부의 環境資源에 대한 관리기능이 합리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수량·수질관리를 조정·연계하는 물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관리 법령의 일체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야생생물·천연기념물과 산림 및 국립공원 관리기능도 효율화된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한층 심화되고 있는 물싸움등 환경자원의 利用과 保全을 둘러싼 集團紛爭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하여 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곱째, 정부는 우리 경제의 規模에 걸맞게 국제 무대에서 環境外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이래 환경문제는 국제외교의 核心議題가 되고 있으며, '97년에는 UN 環境特別總會('97. 6. 9~6. 13)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등 國際環境協約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해 나가면서 UNEP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에 능동 대응하고 海外環境情報의 신속한 수집을 위하여 주요공관의 환경외교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環境專門家를 파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국·러시아·일본등 東北亞 地域國家들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황해오염 공동조사, 유류오염방지를 위한 공동협력등을 추진하고,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環境基礎設施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國際協力團(KOICA)을 통한 환경전문가 초청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統一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北韓의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韓半島를 하나의 環境共同體로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우리나라가 『經濟成長의 模範國家』로서 인정받았던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폭증할 21세기에는 세계 중심무대에 우뚝서는 『環境模範國家』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며, 각종 환경외교의 무대에서도 『베푸는 국가』로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최고기술 일류상품 무한경쟁 이겨내자